

환경부 사령탑 오른 金明子 장관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환경부장관실
일자 : 7월 12일 오전 10시30분

“맑은 물 공급, 깨끗한 공기 확보에 최선”

“맑은 물 공급, 깨끗한 공기 확보,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밝힌 올해의 기본환경정책이다. 김장관은 본지와 의 대담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시민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4대강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환경부의 환경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환경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강 수질 획기적 개선

금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 깨끗한 공기 확보,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등 국

민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욕구 해결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한강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낙동강 수계의 특별종합 대책도 마련하여 나가는 등 연차적으로 4대강 전체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대도시의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깨끗한 공

기 확보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나가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첨단 환경산업 육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폐기물의 감량과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여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려 나가는 데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 천년을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착실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간 환경정책의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환경정책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는 동강 댐 건설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는 영월 댐의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있으

나 우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충분히 과학적인 조사·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부 요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에 필요한 수물되는 지역의 동굴 조사와 동·식물 등 생태환경 조사, 심층 수리지질구조 조사, 1급 수질보전을 위한 모델링 등의 추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데 그 결과가 8월말 경 나올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댐 건설에 관한 타당성에서 물 수요관리를 통한 수자원 확보 가능성과 댐 안전성, 자연생태계, 수질 등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 용역회사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월 댐 건설문제는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각종 조사가 마무리되고 건교부로부터 보완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조속히 환경영향 평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 요즘 다이옥신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각장 등 다이옥신 관리 강화

다이옥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물질중 하나이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아직 초기단계로써 이러한 물질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실태 조사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98년 5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관과 전문가 등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연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단

계(99~2001년)로 이들 물질의 잔류 실태와 생태영향 조사, 2단계(2002~2004년)로 한계농도치 설정과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3단계(2005~2008년)로 환경호르몬물질 감시체계 구축과 총량 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기초하여 1차 년도인 99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이옥신을 포함한 36종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에 대하여 수질·대기·토양 등 총 1백13개 지점에 대한 환경 중 잔류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95년부터 대두되어 현재는 1일 50톤 이상의 공공소각시설에 대하여는 97년 7월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각시설과 중·소형 소각시설은 금년중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소각장 규모별로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이옥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환경문제를 말할 때 법이 있어도 법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상수원 수질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4대강에 환경감시대를 설치하여 오염원 현장 상주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상수

원주변지역의 수질오염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에는 2회에 걸쳐 환경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청·시·도 등이 참여한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수질오염업소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 무등록공장,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오염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4대강 환경감시대로 하여금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수질오염행위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오염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지도 계몽위주로 행정지도하고 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 무단투기 등 직접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업체는 가급적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감시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환경문제는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문제의 해결은 시민·민간단체·기업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데서 환경보전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가 201종

량제 봉투를 한달에 1장씩만 절약하면 종량제 봉투값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합쳐 연간 2천3백40억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호응을 위하여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환경정책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위해 각종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특히 지난 94년부터는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인데 쓰레기종량제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등을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각종 환경현안에 대해 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환경사랑 실천운동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범시민단체토론회, 환경보전캠페인 등의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민간환경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 환경산업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 봅니다. 환경부의 환경산업 육성 방안은 어떤 것이지요.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

환경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수단을 제공해 주는 산업으로서 화학·우주·항공산업 등과 함께 21세기에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전망됩니다. OECD 등의 전망에 의하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97년 기준 4천2백70억달러 수준으로 향후 10~15년간 연 13%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환경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기술력 부족과 시장협소 등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질의 개선과 그린라운드를 대비하고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환경산업육성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다각적인 육성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환경산업분류를 세계적 추세에 맞도록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술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 첨단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부처별로 분산·추진중인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술 수요자와 개발자간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환경기술개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시장수요 창출을 위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대외수출 및 외자유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며 국내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환경시장에 대한 정보망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예방 차원의 환경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환경회계 도입과 녹색 구매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정책은 환경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면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 정치적 접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발과 환경의 관계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양자를 융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개발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환경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과감히 버려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전이 국내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을 외면한 개발은 결국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아들·딸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화호 오염이나 울산 온산공단 주민이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종 개발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환경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예방(precautionary)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환경 투자의 이러한 성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기도 어려워지게 하는’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은 결코 비용이 아니고 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예

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문제 해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연이 전혀 없으면서 오존 생성물질도 7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버스는 기존의 경유 버스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고 충전소 설치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초기보급 단계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천연가스 버스를 2002년까지 5천대 보급할 경우 1천9백50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해 5백85억원의 예산을 잡고 예산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물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64% 수준이고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도관의 노후화로 수도물의 누수율이 1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8억9천만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청댐 용수공급량의 2.7배에 달해 수도물 수질악화와 함께 연간 3천8백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정부재정에서 환경부문 투자를 타 부문에 우선하여 지원해 주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원인자부담원칙 외에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물이용부담금제는 바로 이러한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그리고 영산

강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물이용부담금제를 적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환경이 이데올로기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국가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공해물질의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환경에 대한 국제협상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문제 국민협조 절실

다가올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지구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무역규제 등 앞으로의 국제경제질서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명분으로 통상무역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구속력 있는 국제 환경협약들도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 국내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잘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의 특성상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이 국경간에 이동하여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문제라든지 황해오염과 같은 문제는 국가들간에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역환경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협상의 무대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개도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의 규제압력에 어느 정도 무임승차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96년 말 선진국그룹인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 더 이상 개도국으로 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환경외교와 국제협상능력의 제고가 한층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무역환경의 연계 논의 등 분야별로 관계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인 동향 파악과 협상 대책들을 마련하고 국제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규제 등에도 사전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제경쟁력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 끝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모든 시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㉔